



CORRUPTION ZERO

- 01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 체결
- 02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 향후 추진 주요내용
- 03 시민헌장 서명식 / 윤경포럼 CEO 서약식
- 04 공기업 임원선임과정·예산집행 투명성 강화제도개선 권고
- 05 환경분야 단속·점검업무 제도개선 권고
- 06 부패방지 정책 지역설명회 / 부패방지 유공자 정부포상
- 07 부패방지 전문가 과정 운영 / 신간안내
- 08 반부패 토막뉴스

제26호 2005.3.31



협약 체결식은 정부수립 이후 부패극복을 위하여 4대 부문이 함께하는 최초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사회적 연대가 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
KICAC

News Brief



시민사회, 공공부문, 재계,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은 2005년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백범기념관에서 역사적인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선진사회 실현의 발판 『투명사회협약』체결

시민사회, 공공부문, 재계,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은 2005년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백범 기념관에서 역사적인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연초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촉구하는 1백인 시민선언'에 의해 촉발된 투명사회협약(이하 협약)은 정부·정치권·재계·시민사회(이하 4대부문) 실무대표단들의 두 달여에 걸친 논의 끝에 이날 체결식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정부측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포함한 주요 국무위원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 정치권에서는 임채정 열린우리당 당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 재계에서는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경제5단체장과 4대 그룹 회장이, 시민사회에서는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이남주 한국외국어대 이사장 등이 체결식의 대표 서명자로 참석하였다.

협약 체결식에 이어 참가자 전원은 '법과 원칙의 준수, 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 극복, 건전한 경제적 의무의 이행과 정보부패의 극복, 적극적 참여고발정신발휘, 반부패교육의 실천' 등을 포함하여 모두 10개 조로 구성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헌장' (이하 시민헌장)에 서명하였다.

사회협약의 주요내용은 ●반부패시스템의 발전과 개선 ●공공부문, 사적부문 그리고 정부 부문의 투명성 개선 ●유엔반부패협약의 인준 ●시민사회단체들의 책임성 강화 ●공공교육에서의 반부패교육의 강화 ●부패친화적 문화의 극복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 체결식은 정부수립 이후 부패극복을 위하여 4대 부문이 함께하는 최초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사회적 연대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모든 분야의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관련법들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함께 노력해야 하며, 투명사회협약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 긍정적이며 필수적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투명사회협약』향후 추진 주요내용

투명사회협약은 한국사회 주요 반부패의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4대 부문 대표들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휘되는데 주요 내용으로 ●공공부문은 부패통제기관의 역할조정,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 민간참여의 확대,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 정보공개법 개정, 반부패교육 강화, 공기업투명성 개선 ●정치부문에서는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윤리위원회 강화, 백지신탁제 도입, 불법정치자금과 불법로비의 근절 ●기업부문은 기업윤리의 강화, 하도급비리 개선, 감사위원회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정보공시 강화,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시민옴부즈만,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의 도입 등이다.

자발적 서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4대부문은 각 부문의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협의회는 협약의 이행·평가·점검·확산·갱신 등 협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4대 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협약 체결과 더불어 4대 부문은 제도개선, 법의 제·개정을 포함하여 2005년 내에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문의 주요 대표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법조·교육·언론·종교·노동계의 추가협약과 시민들의 시민헌장 서명과 실천을 통하여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투명사회협약은 한국사회가 부패온존, 부패친화적 사회구조를 유지한 채 선진사회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며 안정적 저성장, 깊은 성장을 지향하는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화의 하향적 방식이나 민주화의 상향적 방식과 같은 일방통행식의 의사소통 보다는 사회 각 부문의 수평적 연대에 기초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협약은 유럽의 선진사회들이 국가적 위기와 갈등의 시기에 사회 각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에 기초한 협약을 새로운 발전의 기초로 삼은 것에 주목하며, 한국사회도 '협약'을 통하여 부패를 극복하여 국가신인도를 제고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각 부문의 주요 대표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법조·교육·언론·종교·노동계의 추가협약과 시민들의 시민헌장 서명과 실천을 통하여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투명사회협약』의 주요 내용

공공 부문

- 부패방지시스템 개선 :
 - ① 부패통제 관련기관 역할조정
 - ② 민간부문 참여 확대
 - ③ 자체감사 실효성 제고
- 제도개선 :
 - 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②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
 - ③ 정보공개법 개정
 - ④ 공기업 인사, 경영,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 강화
 - ⑤ 부패공직자 양형기준 강화
 - ⑦ 공직부패 수사전담 특별기구 설치
 - ⑧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
- 공직자 윤리 강화 :
 - ① 이익충돌 회피 제도 마련
 - ② 공직자윤리위원회 강화
- 반부패 투명성 교육강화
- UN 반부패협약의 비준

정치 부문

- 국회의원 윤리 :
 - ① 불체포특권 제도 개선
 - ②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강화
 - ③ 임기 중 이해충돌 방지 정치 강화
- 정치자금 :
 - ① 불법정치자금 차단 위한 법·제도 재정비
 - ② 불법정치자금 국고 환수
- 정치환경 개선
- 청탁과 로비 :
 - ① 불법청탁과 불법로비 금지, 투명한 로비문화 정착과 제도화

경제 부문

- 윤리경영 강화 :
 - ① 윤리강령과 윤리경영 담당조직 강화
 - ② 기업 내부 부패문제 개선
- 회계 투명성 제고 :
 - ① 감사위원회 전문성 제고
 - ②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개선
 - ③ 공시서류에 대한 CEO, CFO 인증의무화
 - ④ 정보공시 강화
- 소유지배구조 개선 :
 - ①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 ② 부당내부거래 차단 위한 제도개선
- 사회적 책임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UN 글로벌 컴팩트에 적극 참여

시민 사회

- 시민사회책임성 강화 :

시민사회 윤리강령 정착과 책임성, 공익성, 투명성 강화
- 부패친화적 사회문화 극복 :
 - ① 반부패시민헌장 제정
 - ② 반부패실천 프로그램 확대
-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입법촉구 활동 :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납세자소송 등 주민참여제도의 입법촉구 활동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헌장』서명식 개최



부패방지위원회 직원들이 이날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 서명식을 마친 뒤 준법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05. 3. 21(월) 14:00 17층 대회의실에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서명식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방지의 총괄기구로서 지난 3월 9일 시민사회와 정계, 경제계, 정부 등 각계가 참여한 가운데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 파급됨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고질화된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 설 것을 결의함과 아울러 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시대정신과 사명감을 고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지난 3월 9일 백범기념관에서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이 부패문제를 근원적이고도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데 비해, 이번 『시민참여헌장』(Citizens' Charter for a Transparent Society)은 직장인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패근절을 위해 이행해야 할 규범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원장과 전직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을 직원 대표자 남녀 각각 1명이 낭독 후 전 전 직원이 서명식을 가졌다. 위원장 및 직원 30명이 천으로 된 구호 '다 함께 더 맑게, 투명사회로' 등 11종을 들고 퍼포먼스를 가졌다.

앞으로도 부패방지위원회는 4월중 발족 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공부문(중앙부처,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추가협약을 추진하면서 홍보책자 발간 및 기획보도, 주한 경제단체 및 해외 홍보 등 투명사회협약이 들불처럼 확산됨으로써 "부패 없는 선진한국"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 윤경포럼 CEO 서약식 개최



산업정책연구원은 3월 9일(수) 프레스센터기자 회관에서 정재계 인사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다짐'선언식을 가졌다.

산업정책연구원은 윤경포럼 발족 2주년을 맞아 2005년 윤경포럼 CEO서약식(윤리경영, CEO가 움직인다)을 3월 9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하였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CEO가 변해야 기업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하에 출범한 CEO서약식-우리의 다짐 운동은 지난해 윤경포럼 발족 1주년을 기념해 시작됐으며, 「우리의 다짐」선언문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최종책임이 CEO에게 있음을 약속하는 윤리경영 확산운동으로 1회 서약식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올해 윤경포럼은 CEO 서약식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학계, 병원 등 사회전반으로 확대해 CEO 중심의 윤리경영을 전개하였다.

서약식에 이어 윤경포럼 세미나에서는 카길코리아 김기용 대표이사 회장의 "윤리경영과 리더쉽"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여 해외 기업의 다양한 윤리경영 시스템과 기업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서울대 경영대 교수)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국내 실정에 맞춘 한국형 지속가능성 보고 모델을 제시하고, 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하였다.

이번 서약식은 단순히 기업이 윤리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사인만하는 것이 아니고, CEO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윤리경영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는 실천의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기업 임원선임과정 ·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제도개선 권고

부패방지위원회는 공기업 분야 임원선임과정 · 예산집행 투명성 등 강화를 위해 3월 14일(월) 기획예산처 · 재정경제부 · 공기업 주무부처 · 13개 정부투자기관 등 관계부처 등과 함께 “공기업분야 임원선임과정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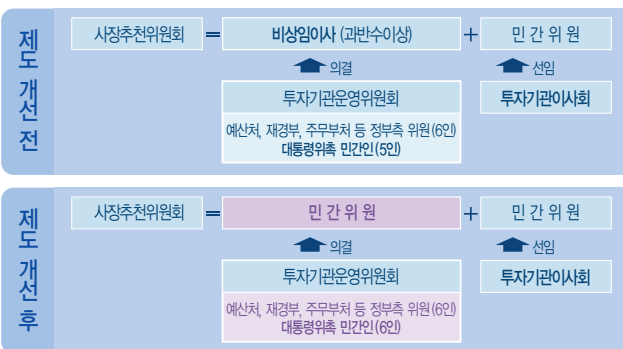
1. 임원선임 제도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 추천 → 주무부처장관 제청 → 대통령이 임명하나
- ‘사장추천위원회’는 정부부처 위주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와 이사회에서 선임된 민간위원으로 구성 · 운영
- ‘사장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가 감독부처의 영향력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어 공정성 논란 소지
- 감사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결 → 기획예산처장관 제청 → 대통령이 임명하나, 공모절차 및 청렴성 검증절차 미흡
- 상임이사는 주무부처장관이 임명함으로써 투자기관의 자율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고, 인사철마다 주무부처의 간부에 대한 로비 등 논란 지속
- 감독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들이 산하기관 · 관계회사에 재취업하고 있어, 감독기관으로서의 통제가 어렵고 로비활동 하는 사례가 많음
- ※ A공사는 지분을 보유중인 관계회사에 임원급 9명 진출, B공사 퇴직자 11명은 자회사에 재취업, C공사는 출자회사에 사장 4명 등 15명 재취업

[개선대책]

- ▶ 임원 선임과정 개편
- ‘사장추천위원회’를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선임 민간위원과 투자기관이사회 선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절차 · 기준을 명확화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정부위원과 동수(6명)로 구성,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위촉절차의 법제화



- 감사 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
- 감사를 추천하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정부위원과 동수(6명)로 구성
- 감사 선임시 공모제 도입 등 공정성 제고
- ◆ 다만 공모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강구
- 청렴성 검증을 위해 부방위 협의절차 신설



-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상임 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처장관 → 투자기관장으로 이양
- ※ 13개 정부 투자기관 상임이사중 자체승진 52명, 공개모집 2명, 관련기관 1명이며, 자체 임용비율이 95%로서 주무부처 장관의 임명권 보유는 의미가 적음
- 산하기관을 관리 · 감독하는 부처의 공직자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1년동안 임원으로 재취업 제한
-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산하기관도 산하기관관리기본법, 개별법, 정관 등에 정부 투자기관 임원선발 과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2. 자율적 부패통제 역량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감사결과를 사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형식을 통해 사전 처벌수위를 조정하는 등 사실상 사장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
- 공기업별 사규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적용 및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제재가 형식적으로 운영
- ※ 부패행위(3년간 총 4,419건)에 대해 대부분 주의 경고(93%)로 가볍게 처벌, 수십만원 금품수수도 기관별로 해임 ~ 경고까지 다른 기준 적용
- 주요사업을 기획단계에서 시행까지 단일부서에서 처리하여 로비 집중
- ※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수출지원금 대출 업무를 수출금융팀 담당자가 접수, 대출, 사후관리까지 단독 처리(공사)

[개선대책]

- 감사실장 내부공모제 도입, 감사실 직원 다면평가제 제외, 전보시 2단계까지 보직관리 등 전보관리 강화
- 13개 투자기관의 ‘징계양정기준’과 부방위에서 권고한(04.9.3) ‘징계적정성 제고방안’을 통합한 ‘표준안’을 마련, 재경부령 · 지침으로 제정
-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이 국가계약법령과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으로 2원화되어 있는 것을 국가계약법으로 일원화하고, 뇌물금액 등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 제고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삭제)
- 주요사업의 경우 집행과 자금관리 담당부서를 기능별로 구분하는 상호견제장치 마련

3. 계약, 예산집행의 합리화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계약법령에 어긋난 부당 수의계약 발주, 협력업체 선정, 관급자재 납품관련 편법지원 등 계약관련 부패 여전
- ※ 수역원 상당 시설공사를 자회사와 92회 수의계약한 사례 (공사) 등 56건
-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사규를 제정하여 공개경쟁 없이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만 독점적 사업권 부여
- ※ 퇴직직원에게 978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권 변칙 발주 (공사) 등
- 업무추진비, 협력비 등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외로 변칙 · 허위 집행
- ※ 정보활동비, 지역협력비를 접대비로 사용한 사례(공사) 등 6건

[개선대책]

-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어긋난 사규 및 지침 일제정비(총 19건)
- 관급자재 품목 및 업체선정 지침 마련(공기업 전체)
-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만 특혜성 사업권 부여 행위 방지
-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권(공사), 송전협력업체 운영(공사)등에 경쟁체제 도입
- 업무추진비 · 협력비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종업소 사용금지되는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환경분야 단속·점검업무 제도개선 권고

부패방지위원회는 환경분야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3월 23일(수) 환경부와 합동으로 “환경분야 단속·점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추진배경

- ▶ 단속·점검분야는 그동안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이 높음
※04년 청렴도 측정결과 단속업무의 민원인은 단속 기준·절차의 현실성과 정보공개 정도가 낮으며, 이의제기가 매우 곤란한 것으로 인식
- 대표적인 단속·점검분야인 환경분야는 비록 소액·소규모 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패가 발생하여 준법의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단속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으로 투명성이 낮고 행정처분감정규정의 포괄성으로 재량권 행사의 남용에 따른 비리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
- ▶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정비, 단속과정의 투명성 확보, 주민참여 등 근원적인 부패근절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부패유발요인이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제도개선 권고 주요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지도·점검 담당자와 대상업소 간의 유착으로 인한 위반사항 묵인 등 부패사례 빈발
※○○청 및 ○○출장소 직원 3명이 평소 ○○(주) 이사로부터 4회에 걸쳐 총 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자의적인 업소선정 및 무리한 목표 달성 추구로 형식적인 지도·점검 실시
※○○시 ○○구의 경우 지도·점검 담당 3개팀 총 15명이 5,600여개 사업장 관리
- 행정처분 감경 및 과징금 대체 규정이 모호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관리규정이 미비하여 재량권행사의 남용 등 부패발생 소지 상존
※○○청 직원이 오염물질 무단방류로 단속된 레미콘 제조업체로부터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만원 수수

[개선방안]

-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 사후관리 등 지도·점검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지도·점검업무 공개 시스템” 구축·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상시감시 체계 유지
- 모호한 감경조항, 포괄적인 감경규정을 구체화하는 행정처분의 감경·과징금 대체처분 요건 및 범위의 구체화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모호한 감경조항, 과징금 대체처분 요건 등 포괄적인 감경규정을 구체화
- ◆ 감경요건 중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 설정
 - ※예시: 폐수배출업소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동 시설을 이용하여 배출을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한 경우 등
- ◆ 감경요건 중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 설정
 - ※예시: 전염병 발생 등에 따른 의료기관 부족시, 환경변화에 따른 폐기물의 과다발생으로 폐기물처리업소의 영업지속이 필요한 경우 등
- ◆ 행정처분 종류별로 감경범위 설정
 - ※예시: 조업정지 등 기간이 정하여진 처분은 행정처분차수(1차~4차)에 따른 해당 처분기준에서 2분의1 한도를 범위내로 하고, 허가취소나 폐쇄명령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처분은 사유 해소시까지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 등
- ◆ 행정처분의 과징금 대체요건 구체화
 -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과징금대체 요건인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 마련 (수질환경보전법상 기준)
 - ※예시: 병원·발전소 등의 조업정지시 환자, 주민 등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관 합동단속을 전면 확대 실시하여 민·관 합동단속 운영의 활성화
 - 민·관 합동단속 대상업소를 모든 업소로 확대하고 실시기관에 지방환경청 및 환경출장소를 포함
-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한 부패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사후관리 세부규정 마련
 -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관리의 확인횟수, 확인방법, 조치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하여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한 부패소지 최소화

『05년도 부패방지 정책방향』지역설명회 개최

부패방지위원회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지방공직자의 이해와 공감을 통하여「범정부적 반부패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 7~3. 11 기간중 「05년도 부패방지 정책방향」에 대한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 대구·경북, 경남,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5개 권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 국세청, 국토관리청, 병무청, 중소기업청, 체신청, 조달청, 보훈청, 관세청 등 각급 행정기관의 서기관급이상 간부 1,58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부패방지 평가보고대회시 보고된 「04년도 부패방지 평가결과 및 05년도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수범기관 사례발표 영상물을 시청하였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번 지역 순회설명회를 통해 부패추방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지방공직자에게 인식시켰으며, 지난해부터 접화된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물결운동」을 지방 구석구석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월 7일(월)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지역 공직자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부산지역 부패방지 정책설명회」에서 부패방지위원회 이영근 정책기획실장이 「04년도 부패방지 평가결과 및 05년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패방지 유공자 『정부포상』실시

부패방지위원회는 3월 14일(월) 출범 3주년 행사 일환으로 대회의실에서 반부패 유공기관 및 유공자 선발 정부포상식을 갖고, 반부패 취약분야 업무 혁신에 공이 큰 환경부 최병찬 부이사관에 녹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유공자 35명(단체 포함)에 대한 포상전수식을 가졌다.

최병찬 부이사관은 시민이 직접 환경행정에 참여하는 ‘시민 환경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 및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취약 업무별 부패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큰 공적을 올렸다.

녹조근정훈장에는 효율적인 병역관리 및 ‘청렴 물결 운동’을 전개한 공로로 병무청 조규동 주사가 선정됐다. 또한 법무부의 이영호 사무관, 관세청의 여영수 서기관, 주택공사의 서영감사, 국세청의 남기두 주사는 각각 근정포장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표창에는 단체에 건설교통부와 “MBC-TV 아주특별한 아침” 제작팀이 받았으며, 한국방송공사(KBS) 김원장 기자, 건설교통부 도태호 서기관, 변호사 민경한 법률사무소 민경한 대표, 부산광역시 이성숙 사무관, 해양경찰청 양용섭 경위, 농업기반공사 조병열 감사실장, (주)포스코 이동만 기업윤리실천 사무국장이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에는 단체에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교육청, 한국전력공사가 받았으며, 전라남도교육청 백수중학교 한명술 교장,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김영미 교육실장, 국민은행 경기지역본부 김태곤 본부장, 정보통신부 함영길 주사, 충청북도교육청 황익상 사무관, 중소기업청 신성식 주사, 국방부 황인규 육군소령, 노동부 김부희 사무관, 해양수산부 정진일 주사, 전라남도 박정재 주사보, 서울도봉경찰서 김남규 경위가 받았다.

이 같은 정부포상 수상자들은 부방위가 국가 투명성 제고 및 청렴생활 솔선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189개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3월 14일(월) 대회의실에서 출범 3주년을 맞아 반부패 취약분야 업무혁신에 공을 세운 유공자 35명(단체 포함)에 대한 훈·포상 및 표창 수여식을 가지고 있다.

『부패방지 전문가 과정』운영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된 부패방지 전문가 과정(정보통신과정)에 참석한 교육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부패방지 전문가 과정-정보통신과정』을 운영하였다.

부패방지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하여 반부패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 및 사회 전반에 반부패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과정에는 정보통신본부, 우정사업본부, 체신청 등 정보통신부 소속기관 감사 담당 공무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발전과 부패방지 △감사시스템의 개선 사례 △정보통신부 청렴도 향상 방안 △해외 반부패 정책 사례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정보통신분야 부패 및 부조리 사례 분석 등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우리나라 부패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 동안 현장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던 부분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을 이수한 공직자는 해당기관의 반부패 전문가로 기관의 반부패 교육과 상담을 받는 등 반부패 전도사로 활동하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4월에 일반행정과정 운영을 비롯하여 금년중에 교육행정과정(5~6월), 자치행정과정(9월), 경찰행정과정(10월), 공기업과정(11월), 법무행정과정(12월)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간안내

2004년도 『부패방지 백서』 발간



부패방지위원회는 출범 3주년을 맞아 2004년도 한해 동안 추진하였던 부패방지 활동의 주요 내용을 수록한 『2004년도 부패방지 백서』를 세 번째로 발간하였다.

주요내용은 부패방지과 관련된 전반적인 동향과 정책방향, 부패방지위원회의 분야별 활동내용,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 그리고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부패방지활동 우수사례 등을 수록하였으며, 특히 부패방지위원회 활동내용과 관련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시책수립과 평가, 신고심사,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 기본적인 부패통제 기능과 함께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 및 『부패방지대책 추진·점검회의』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대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 등을 수록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헌법기관, 사법부, 학회 및 연구기관, 각 주요대학 도서관 및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부패방지교육 매뉴얼『부패 바로 알기』 발간



부패방지위원회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교교육과정에서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반부패 의식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학교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패방지교육 매뉴얼 즉 『부패 바로 알기』를 발간하였다.

『부패 바로 알기』는 현직 중등학교 도덕 교사들이 집필하고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의 감수를 거쳐 발간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부패현상의 이해, 부패의 원인분석과 대책탐색, 우리 안의 희망 찾기,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으로 구성되었다.

3월 중순까지 전국의 중학교, 교육청 등에 배포하였으며 부패방지위원회 교육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고질적인 경찰부패 근절 위해 '경찰민원감독기구' 설치해야: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보고서 지적

만성적인 경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민원 감독기구'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소장 김일태)는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용역의뢰한 '경찰부패방지 시민참여 실천방안 개발' 보고서에서 미국 등 선진국처럼 독립된 경찰 전문 민간기구에서 고질적인 경찰 부패를 감시·조사하는 감독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통제 욕구에 의해 경찰을 지배·조정하는 수단으로 선별적인 부패행위 적발이 이뤄지는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독립감독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단기 부패방지 실천방안으로 경찰시민감시단 구성, 경찰청렴도 조사모델 개발 부패유발 요인 분석 및 제도 개선 등을 실천할 것을 제시했다.

또 중기적 방안으로는 실효성있는 경찰 윤리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강화 등도 보고됐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경찰위원회 감사관실(OIG: Office of Inspectors General)이 경찰민원업무 사본을 보고받아 필요할 경우 수사하고 있으며 영국의 IPCA, 홍콩의 IPCC 등의 경찰감독 민간기구에서 경찰 부패를 감시하고 있다.

PERC 조사결과 : 한국 부패지수 아시아에서 5위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팅사(PERC)가 지난 1~2월 아시아 12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인 900 여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를 조사해 3월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6.50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작년 조사에서 한국은 6.67점을 기록했다.

PERC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는 조사 대상국의 부패 정도에 따라 0점부터 10점까지 산출되며 10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심하다.

1위는 올해도 싱가포르(0.65점)가 차지하여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평가되었으며 일본과 홍콩이 3.46과 3.50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부패한 국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9.10점)로 나타났다.

한편 PERC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부패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에 생산기지를 설치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중국의 부패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나라명	부패지수
1.싱가포르	0.65
2.일본	3.46
3.홍콩	3.50
4.대만	6.15
5.한국	6.50
6.말레이시아	6.80
7.태국	7.20
8.중국	7.68
9.인도	8.63
10.베트남	8.65
11.필리핀	8.80
12.인도네시아	9.10

TI 보고서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상황

3월 7일(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24개국 중 호주, 그리스, 일본, 네덜란드 등 9개국은 자국 기업이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는 TI에서 올해부터 매년 발표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각국의 TI 지부로 부터 수집한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은 1999년 2월 발효되어 현재 30개 OECD 회원국 및 5개 비회원국들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 나라도 동 협약에 근거하여 1998년 12월 28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여 199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TI의 이번 조사는 35개 OECD 협약 서명국 중 2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T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4개국 중 외국공무원 뇌물공여 관련 수사 또는 기소를 실시한 국가는 15개국이며, 동 협약 시행 이래 한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의 4개 국가만 외국공무원 수뢰 사건에 관해 1건 이상의 수사를 실시했으나 아직까지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미국에서는 관련 기소가 35건이었던 반면, 덴마크, 핀란드, 멕시코, 영국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기소가 한 건도 없었다. 한편 호주, 그리스, 일본, 네덜란드를 포함한 9개국에서는 외국공무원 뇌물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수사나 기소 사례가 전혀 없었다.

TI는 동 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들에게 외국공무원 뇌물사건 처리 관련 전담기구 설치, 관련 신고 접수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및 동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OECD에서 뇌물방지 실무작업반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국가별 협약 이행 심사 프로그램을 2007년 이후까지 지속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동 보고서의 전문은 TI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http://www.transparency.org/building_coalitions/oecd/oecd.html